

#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개편방안

이 철 기\*

- |                        |                           |
|------------------------|---------------------------|
| I. 서론                  | IV. 한·미동맹의 개편방안           |
| II. 주한미군 재배치의 배경과 방향   | V. 결론: 한국 안보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
| III.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그 영향 |                           |

## Abstract

### The Reduction of USFK and the Realignment of the ROK-U.S. Alliance

The ROK-U.S. Alliance for the last half-century is at the threshold of a revolutionary transformation. The reduction of the 2nd Infantry Division and the realignment of U.S. troops in Korea is considered an extension of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of U.S. forces across the world. Its direction and reasons, had already been reported in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1*. The future goal of the U.S. forces is to establish a posture that can respond to diverse and unpredictable security threats more promptly and effectively. The future USFK will be playing the role of a rapid strike forc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he realignment of U.S. troops in Korea may have a bad influence on our security environment as follow: the acceleration of arms race in the Northeast Asia, the strengthening U.S.-Japan

Alliance and the restoration of Japan's Militarism, an increase in the ROK's defense expenditure and its expansion of armaments, the transformation the ROK-U.S. Alliance into regional alliance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striking power against North Korea.

In this context, the existing hierarchical Korea-U.S. Alliance should develop to become the equal relationship.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should try to readjust the ROK-U.S. Alliance as follow: being restricted to "pure defensive alliance," the reformation of the Combined Forces Command system and the dismantlement of the UN Command headquarters. The realignment of USFK will be an opportunity for readjustment of the ROK-U.S. relationship and revise the paradigm of the Korea's security policy.

**Key Words:** USFK, ROK-U.S. Alliance, South Korea's security policy, reduction of USFK, realignment of ROK-U.S Alliance

\*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 I. 서 론

한미관계가 새로운 전환기를 맞고 있다. 2003년 4월 9일부터 시작된 「미래한·미 동맹정책구상회의(FOTA: Future of The Alliance)」 등을 통해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에 관한 한·미 간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과 미국은 2004년 10월 6일, 2008년 말까지 3단계에 걸쳐 미 2사단을 중심으로 1만 2,500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주한미군의 감축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또한 윤광웅 국방장관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10월 16일, 지난 제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합의한 용산기지 이전에 관한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Land Partnership Plan)」 개정안에 공식서명 했다.

주한미군 감축은 사실 그리 놀랄 일은 아니다. 미국은 세계전략 변화와 군사변환 차원에서 해외주둔군 재배치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을 추진해 왔다.

그런가 하면 두 여중생의 미군 장갑차에 의한 사망사건을 계기로 촉발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비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주한미군의 재편과 맞물리면서, 한·미동맹관계의 재정립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탈냉전이 되고 남북관계 및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한미군문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주한미군의 장래와 한·미동맹관계의 재정립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것은 반미가 아니다. 또 진보나 보수의 문제도 아니다. 외국군대가 이 땅에 주둔하고 있다는 민족주의적 감정의 문제는 더구나 아니다.

한국전쟁 직후 32만 5천여 명에 이르던 주한미군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감축으로 현재 3만 7천여 명이 주둔하고 있다. 이번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편은 이전의 주한미군 감축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전의 감축이 단순한 양적인 변화를 의미한다면, 이번 감축과 재배치는 주한미군의 질적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주한미군의 규모와 구조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한·미동맹 자체의 성격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게다가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 전략정책구상회의(SPI)」를 신설하여, 한·미동맹관계의 새로운 변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와 개편이 가시화되고 있다.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재편 방향과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에 큰 변화를 불가피하게 하고 있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대북억제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금까지의 생각에 큰 변화를 몰고 오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의 재편과 역할 변화가 한반도 및 동북아정세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 변화들은 결국 한·미동맹관계의 재정립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을 요구하고 있다.

## II. 주한미군 재배치의 배경과 방향

### 1. 주한미군 재배치의 배경

윤광웅 국방장관과 리언 라포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2004년 10월 16일, 제1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합의한 용산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포괄협정」(UA) 및 「이행합의서」(IA)와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안에 공식서명 했다. 한·미 양국은 용산기지 등 서울도심에 산재한 미군기지를 반환 받고 이들 기지를 2008년까지 평택지역 349평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또 양측은 LPP 개정협상을 통해, 당초 2011년까지 반환하기로 했던 일부 미군기지를 2008년까지 앞당겨 반환하고, 주한미군 재배치 계획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한국쪽 공여지는 현재 7,320만평의 34% 수준인 2515만평으로 줄이고 기지 숫자도 현재 41개에서 17개로 축소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한국과 미국은 2008년 말까지 3단계에 걸쳐 미 2사단을 중심으로 1만2,500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이라크에 차출된 미 2사단 3,600명을 포함해 2004년 내에 5,000명이 1단계로 철수하고, 2단계로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3,000명과 2,000명, 마지막 3단계인 2007년과 2008년에 2,500명이 감축된다.<sup>1</sup>

<sup>1</sup> 미국은 당초 2004년 7월, 제9차 FOTA에서 주한미군 1만2,500명을 2005년 말까지 감축하겠다고 한국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한 바 있다. 한국측 협상대표들은 주한미군 감축 시기를 2008년으로 늦춘 것이 협상의 성과라고 자랑하고 있으나 이러한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 힘들다. 미국측이 2005년을 감축시안으로 내놓았던 것은 한국과 협상에서 유리한 입지에 서고 한국에 대한 압력카드로 이용한 측면이 크다. 미국은 이 '감축카드'를 통해 용산기지이전협상과 한국군의 이라크파병에서 유리한 협상결과를 이끌어냈다. 또 현실적으로 금년 10월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새회계연도 예산에 이전비용이 산정돼 있지도 않고, 이전할 장소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1만2,500명의

한·미 양국 간에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에 관한 협상이 마무리됨에 따라, 합의 내용대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감축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처럼 미국이 미 제2사단을 중심으로 일부 병력의 감축을 포함해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이 추진되고 있는 배경은 다음 몇 가지로 분석된다.

첫째, 미국이 현재 추진 중인 전세계 배치 해외주둔미군의 재배치와 재편계획의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이것이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동기 및 배경이며, 다른 것들은 부차적인 것이다. 전쟁개념이 첨단무기와 장비를 사용하는 과학전으로 바뀌었고, 미국의 세계전략이 변함에 따라 지금까지 대규모 병력을 해외의 일정한 장소에 고정 배치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병력을 줄이는 대신 첨단무기로 보충하여 군수산업체를 위한 새로운 무기수요를 창출하려는 부시 행정부의 의도도 숨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주한미군 재배치는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와 군사변환(Military Transformation) 차원에서 해외주둔군 재배치계획(GPR: 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4개년 국방검토 보고서 2001」(QDR: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1)은 미국의 변화된 국방정책을 담고 있다. 미국의 새로운 국방정책으로 다음의 4가지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미 국방정책의 전략중심축을 아시아로 옮기고, 해외기지를 포함한 전방배치 전력의 의존도를 낮추는 대신 전력투사능력을 강화하고, 정보시스템의 절대적 우위를 유지하며,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군사전력의 기동성을 높이고 경량화 한다는 것이다.<sup>2</sup>

주한미군의 감축과 재배치를 포함한 개편은 이 같은 미국의 정책 및 전략 변화와 맞물려 이미 예견돼온 일이다. 최근 몇 년 사이, 미국의 연구소들과 펜타곤에서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시아주둔 미군의 개편에 대해 연구해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01에 공개된 랜드(Rand)연구소의 보고서는,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따라 주한미군 2사단 병력의 일부를 철수하고, 오산과 군산 공군기지 가운데 한곳을 폐쇄할 준비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

이전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미국의 해외주둔군 재배치계획(GPR)의 마스터플랜이 아직 마련되지도 않았고 일본과 주일미군재배치계획 협상이 마무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한국에서만 대규모 병력을 빼서 다른 곳으로 이전한다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다.

<sup>2</sup> 미국은 국방정책 목표를 ①동맹국 및 우방국들의 안보를 확보하고, ②잠재적국들로 하여금 군사경쟁을 단념케 하고, ③미국의 이익에 대한 위협과 강제를 억지하고, ④역지가 실패할 경우 어떠한 적에 대해서도 결정적인 승리를 달성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 Department of Defense,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Washington D. 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2001), pp. 19-20.

또 비슷한 내용의 2000년 9월 29일자 *Washington Times*의 보도가 주목을 끈 바 있다. 미 국방부와 태평양사령부가 향후 5년 안에 “아시아 주둔 미군의 구성에 관한 근본적인 변화(fundamental shift in the composition of U.S. forces in Asia)”가 고려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인식에 기초하여, 주한미군 제2사단의 철수와 재배치를 비롯해 아시아 주둔 미군의 개편을 연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시아 지역 내 미군사력에 손실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함·공군력·신속배치 지상군을 활용하는 선에서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감축한다는 것이 골자다.<sup>3</sup> 이처럼 미국은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시아주둔미군의 개편과 재배치문제를 꾸준히 검토해 왔다.

미국의 GPR 구상은 이미 *QDR 2001*에 잘 나타나 있다. 해외주둔미군재배치의 지향점으로 다음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첫째, 서유럽과 동북아를 넘어서 추가적인 기지와 주둔지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세계 중요지역에서 미군에 더 큰 유연성(flexibility)을 제공하기 위한 기지체제를 발전시킨다. 둘째, 항구기지가 없는 지역에서 미군이 훈련과 군사연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외국 시설에 대한 일시적 접근을 제공한다. 셋째, 지역적 억지 요구에 기초하여 병력과 장비를 재배분한다. 넷째, 핵무기와 미군의 접근을 거부하는 기타 수단으로 무장한 적에 대항하기 위해서 원거리 위협원에 대한 원정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수·해상수송, 사전배치·기지인프라·대체 상륙지점·새로운 작전병참 개념을 포함해 충분한 기동성(sufficient mobility)을 제공한다.<sup>4</sup>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의 재배치 및 감축계획은 2002년 5월 3일, 미국 국방장관 도널드 럼스펠드가 2004년부터 2009년까지의 5개년 계획인 「국방계획지침」(Defense Planning Guidance)이라는 비공개 문서에 서명하면서 현실화되었다. 부시 대통령은 2003년 11월 25일, 유럽과 아시아 등 전세계에 주둔 중인 미군의 재배치를 내용으로 하는 해외주둔미군재배치계획(GPR)을 공식 발표했으며, 2004년 8월 16일에는 향후 10년간 아시아와 유럽 등 해외주둔 미군 가운데 6만~7만 명을 미 본토로 철수시키겠다고 선언했다.<sup>5</sup>

특히 아시아의 경우 주둔미군의 재편과 재배치 필요성이 다른 지역보다도 더 큰 지역이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세계전략의 핵심으로 설정하고 있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 주한미군을 비롯한 아시아 주둔 미군의 개편과 재배치는 긴급한 현

<sup>3</sup> *Washington Times*, September 29, 2000.

<sup>4</sup> Department of Defense, *op. cit.*, pp. 26-27.

<sup>5</sup> 『연합뉴스』, 2004년 8월 17일.

안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서는 동북쪽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현재의 아시아 주둔미군을 보다 남쪽으로 이동 배치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괌을 중심기지로 삼고 필리핀에서 기지를 재확보 하려는 시도도 이러한 전략적 목표와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QDR 2001에서 ‘도발지역’(challenging area)으로 규정하고 있는 벵갈만에서 동해에 이르는 ‘동아시아연안’(East Asian Littoral)은 바로 중국에 대한 봉쇄선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6</sup>

둘째, 이른바 ‘부시 독트린’에 따른 ‘불량국가들’(rogue states)에 대한 선제공격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인계철선’(wire-trip)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인식되어 온 미 제2사단의 후방 재배치는 북한의 보복공격으로 인한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보다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기도 한다.

미국은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들에 대한 선제공격을 새로운 군사전략으로 채택한 바 있다. 미국 국방부가 2002년 1월 8일 의회에 제출한 「핵태세보고서」(NPR: Nuclear Posture Review)는 기존의 전략을 수정하여 핵무기를 선제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잠재적 공격대상 국가로 북한을 비롯해 7개국을 거명하고 있다.<sup>7</sup> 이 같은 부시 행정부의 선제공격전략은 2002년 9월 20일 백악관이 발표한 「미국의 국가안전보장 전략」(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보고서에서 보다 명확히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냉전시대 위협의 성격은 적의 군사력 사용에 대한 ‘억제’(deterrence)를 미국에 요구해 왔지만, 소련의 붕괴와 탈냉전의 종식에 따라 안보환경이 큰 변환을 겪고 있다고 전제하면서, 전통적인 억제 개념은 미국의 적들에 대처하는데 더 이상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미국에 대한 새로운 치명적인 도전은 북한을 비롯한 ‘깡패국가들’(rogue states)과 테러리스트들이라고 규정하고, 이들에 의한 적대적 행동을 방지하고 기선을 제압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미국은 ‘선제행동’(act preemptively)을 할 것이라고 언명하고 있다.<sup>8</sup>

셋째,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문제가 갑자기 불거진 데는, 한국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려 한국 내 일고 있는 반미분위기를 잠재우고, 새로 들어선 노무현 정부를 길들이고, 아울러 한국 정부로부터 여러 가지 반대급부를 얻어내려는 의도가 다분히

<sup>6</sup> Department of Defense, *op. cit.*, p. 4.

<sup>7</sup> *Nuclear Posture Review* (Excerpts), submitted to Congress on 31 December 2001 <<http://www.globalsecurity.org/wmd/library/policy/dod>> (검색일: 2003년 2월 10일).

<sup>8</sup> The White House,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ashington D.C., September 2002), pp. 13-16.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 후보의 당선 및 노무현 정부의 등장과 때맞춰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 문제가 갑자기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바 있다. 미국의 언론과 고위관리들은 주한미군의 재배치는 물론 감축 내지는 철수의 가능성까지 흘리면서 한국정부에 대한 압박을 가해 왔다. 대등한 한·미관계를 들고 나오면서 종속적인 한·미관계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이고, 북한핵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다른 목소리를 내려는 한국의 새 정부에 대한 압력용의 의미가 있었다.

미국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의 고위대표단이 미국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미 제2사단의 후방 재배치와 철수의 가능성을 흘리면서 압박을 넣기 시작했다.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 국방장관은 2003년 2월 13일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미국은 한국의 새 정부가 출범하면 재배치와 감축 가능성을 포함한 주한미군문제를 공식 논의할 계획”<sup>9</sup>이라고 증언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재편 가능성을 밝혔다. 또한 미 국방부의 고위관리들도 “한국민이 원하면 내일이라도 미군을 철수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한국정부를 압박했다.

미국의 이러한 압력 내지 협박은 실제로 큰 효력을 거두었다. 이처럼 주한미군 재배치 내지는 철수에 대한 위협을 통해, 미국은 다음과 같은 것을 얻었거나 또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촛불시위가 잦아들고 한국 내 반미분위기가 수그러드는 상당한 성과를 보았다. 둘째, 한국군이 이라크 침략전쟁에 참전하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셋째, 미국무기의 대량 구매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군의 국방비 증액에 대한 압박을 가하고, MD(미사일방어)계획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넷째, 용산기지 등 주한미군기지의 이전과 관련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토지 확보와 이전비용을 한국에 떠넘기는 것이 용이해졌다. 다섯째,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게 되었다.

## 2. 주한미군 재배치와 재편의 방향

주한미군 재편은 크게 다음 두 가지 방향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지상군을 줄이는 대신 해공군력을 강화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첫째, 지상전력인 미 제2사단의 상당한 병력을 감축하여 후방지역으로 재배치하

<sup>9</sup> 『한겨레신문』, 2003년 2월 14일.

고, 대신 해공군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북한에 대한 대응과 억제력의 의미가 있던 미 제2사단 중심의 지상군을 감축하는 대신,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대중국봉쇄전략 차원에서 해공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 주한미군의 기동력을 높여서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하여, 한국 이외에 다른 군사작전지역에 유사시 이동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미 제2사단을 ‘스트라이커여단’(Stryker Brigade Combat Team: SBCT)으로 불리는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하는 것이다. 포병 1개 대대, 보병 3개 대대, 정보·정찰·감시부대로 구성된 ‘신속기동여단’은 장갑차는 물론 탱크파괴용 유도탄과 핵 및 화학방 물질, 정찰차량, 공병 대대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량화된 신형탱크를 이용해 신속이동 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sup>10</sup> ‘신속기동여단’은 신속전개가 가능하면서도 적의 화력을 막아낼 수 있고 적을 제압할 수 있는 화력을 보유한 부대로 편성된다. 이 부대가 무장하는 주요 무기체계인 스트라이커 장갑차는 가볍기 때문에 C-17 수송기나 고속수송선에 탑재되어 신속한 이동이 가능하며, 96시간 이내에 세계 어느 곳으로도 파견이 가능하다.<sup>11</sup>

군사변환을 통해 부대를 신속화·침단화·경량화·표준화·규격화한다는 계획이다. 과거 사단 중심의 기본단위 편제를 독립적인 작전 수행이 가능한 새로운 전투시스템으로 무장한 여단급 ‘행동부대’(Unit of Action: UA)로 개편하여 이를 2008년부터 배치한다는 것이다. 이 ‘행동부대’는 적의 움직임을 탐지하는 무인지상센서, 적의 목표물을 찾고 동시에 파괴시키도록 프로그램된 무기, 휴대가 용이한 상자 형태의 로켓, 자동화 곡사포 등 4가지의 미래전투시스템을 장착한 부대로 운용되며, 최종적으로는 18개의 최첨단전투장비를 통합운용하는 ‘미래형 전투시스템’(FCS: Future Combat System)을 갖춘다는 것이다. 스트라이커부대는 ‘행동부대’로 가는 중간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미래목적군은 실제 전투부대인 UA와 이를 운영 지휘하는 UEx(Unit of Employment-x), 증강된 군단급인 UEy(Unit of Employment-y)로 구성된다.<sup>12</sup>

주한미군의 이 같은 두 가지 개편 방향에 따라, 주한미군에 대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예상된다. 첫째, 주한미군기지의 통폐합이 추진된다. 제2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한·미간에 합의된 바와 같이, 현재 전국에 산재돼 있는 주한미군

<sup>10</sup> 『연합뉴스』, 2003년 5월 31일.

<sup>11</sup> <<http://globalsecurity.org/military/agency/army/bua-list.htm>> (검색일: 2004년 11월 5일).

<sup>12</sup> <<http://globalsecurity.org/military/agency/army/ua.htm>> (검색일: 2004년 11월 5일).

기지를 2개 중심(Hub)기지와 3개의 추가기지로 구성되는 ‘2+3’체제로 통폐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기지는 평택·오산권과 대구·부산·진해권의 두 Hub기지와 한수 이북의 연합훈련센터, 지휘통제본부 역할의 서울용산기지, 공군기지인 군산기지의 3개 추가기지를 유지한다는 구상이다.<sup>13</sup> 이것은 2011년까지 41개 미군기지를 23개 기지로 통폐합해 7개 중심기지체제로 전환하기로 한·미간에 1년 전에 합의했던 ‘연합토지관리계획’(LPP)의 전면 수정을 의미한다.

특히 용산미군기지와 미 2사단의 이전을 비롯해 미군기지들을 평택·오산지역으로 통합하고 있는 것은 미군의 한국으로의 출입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오산공군기지와 평택항은 미군의 신속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지리적 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미 제2사단의 후방 재배치와 감축이 추진된다. 당초 한·미 양국은 미 제2사단의 한수 이남으로의 재배치를 위해 2004년부터 부지매입을 시작하여 2단계에 걸쳐 이전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한 바 있다. 1단계에서는 한수 이북에 위치한 미군이 캠프 케이시와 캠프 레드클라우드 지역으로 통폐합하고, 2단계에서 한수 이북에 위치한 미군을 오산·평택 등 한수 이남으로 이전한다는 것이다.<sup>14</sup>

그러나 미국은 미 2사단을 2단계에 걸쳐 후방으로 재배치한다는 원래 계획 대신, 2004년 7월에 개최된 제9차 FOTA에서 주한미군 1만2,500명을 2005년 말까지 감축하겠다고 한국측에 공식 통보했다.<sup>15</sup> 결국 한·미 양국은 2008년 말까지 3단계에 걸쳐 미 2사단을 중심으로 1만2,500명의 주한미군을 감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에 잔류할 미 2사단의 경우 중무장사단인 제1여단과 항공여단이 2개의 ‘행동부대’(UA)로 개편돼 한국에 상주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6</sup>

셋째, 주한미군의 대규모 전력증강이 이루어진다.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2006년까지 110억 달러 이상을 투입해 주한미군의 전력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주한미군의 전력증강계획에는 무인정찰기 프

<sup>13</sup> 『한겨레신문』, 2003년 6월 11일.

<sup>14</sup> <[http://www.usfk.or.kr/kr/future\\_initiative\\_02.html](http://www.usfk.or.kr/kr/future_initiative_02.html)> (검색일: 2003년 12월 4일).

<sup>15</sup> 미국은 이미 미 2사단의 감축 계획을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단지 용산기지가 이전 비용 협상 등 한·미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접하기 위해 공식화를 미루어 온 측면이 있다. 미국측은 주한미군 감축 의사를 2003년 6월 4일 제2차 FOTA에서 처음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같은 해 9월 29-30일, 우리측이 공론화를 주장하자 미국측은 난색을 표해, 결국 2004년 여름까지 감축문제를 거론치 않기로 했다는 것이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 “NSC 사무차장 백그라운드 브리핑 요약,” 2004년 5월 28일.

<sup>16</sup> 『한겨레신문』, 2004년 8월 20일.

레데터 배치, 패트리엇 PAC-3 여단 창설, F/a18 호넷 전투기 배치, 고공무인정찰기인 글로벌 호크 배치, 정밀유도탄약 도입, 첨단지휘전술통제(C4I)시스템 개선 등이 포함된다. 또 최신에 공격용 헬기 AH-64D 아파치 롱보우 배치, 감시·정찰수집 능력 강화, 전쟁예비물자(WRSA) 등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17</sup>

### 3.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국의 ‘협력적 자주국방론’ 등장

#### 1) 주한미군 재배치에 대한 한국정부의 입장

주한미군문제에 대해 역대 한국정부가 견지해온 입장은 주한미군으로 상징되는 한·미동맹체제는 한국안보의 근간이라는 것이다. 국방부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한·미동맹과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보장이라는 한·미 양국의 공동목표를 실현하고 국가이익을 증진하는데 있어 결정적인 기여를 해왔다”<sup>18</sup>고 주장한다.

또한 주한미군의 장래와 관련해 한국정부는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남북한 간 평화체제가 구축되고 통일이 이루어진 후에도 확고한 한·미동맹관계가 지속 유지되어야 하며, 동북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sup>19</sup>는 것이다.

대통령후보 및 당선자 시절에 “대등한 한·미관계”를 강조해오던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후 주한미군과 한·미관계에 대해서 매우 신중한 입장을 보여 왔다. 노무현 정부는 출범 후 통일·외교·안보정책을 포괄하는 정책구상으로 ‘평화변영정책’을 표방하고 있는데, 이 ‘평화변영정책’과 관련된 국정과제로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추진방향의 하나로 “한·미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한·미동맹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관련해, “미래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공동 협의”, “한반도 안보상황 변화 및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 발전적 조정”, “한·미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한 확고한 공감대 형성 하에 추진”<sup>20</sup>을 들고 있다.

주한미군 재배치 및 재편문제가 미국 측에서 흘러나오자 노무현 정부는 우왕좌왕 하면서 당황하기 시작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초기에 육사 졸업식에서, 주한미군

<sup>17</sup> 『문화일보』, 2004년 10월 7일.

<sup>18</sup> “한·미안보협력” <<http://www.mnd.go.kr/cms.jsp?-id>> (검색일: 2003년 9월 20일).

<sup>19</sup> 국방부, 『국방정책 1998-2002』 (서울: 국방부, 2002), p. 83.

<sup>20</sup> 통일부, 『참여정부의 평화변영정책』 (서울: 통일부, 2003), p. 18.

재배치문제와 관련해 “미래상황의 어떠한 변화에 대해서도 당당하게 대응하고 민반의 준비를 갖춰 나갈 것”<sup>21</sup>이라며 담담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편 고건 총리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해, 미군의 전쟁억제력 저하 반대, 인계철선 유지, 북한핵문제 처리 후 재배치 논의 등 이른바 ‘3원칙’을 밝힌 바 있다.<sup>22</sup>

그러나 2003년 5월 한·미정상회담 후 상황은 급변했고, 한국의 입장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 「한·미정상 공동성명」의 내용과 한·미정상회담의 결과는 미국의 정책과 입장을 사실상 그대로 수용하고 추종한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현안이었던 미 제2사단의 후방 재배치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및 동북아의 정치·경제·안보 상황을 신중히 고려하여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것을 미 제2사단의 후방 재배치가 유보되거나 상당기간 연기된 것처럼 설명했다, 거짓말인 것이 드러나는 데는 불과 한 달도 안 걸렸다. 6월 초 열린 제2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에서, 미 제2사단의 후방배치가 확정되었기 때문이다.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한·미동맹관계의 장래와 관련해 매우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한·미 양국은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한·미정상 공동성명」은 “부시 대통령은 한반도 및 아태지역에서의 미군의 강력한 전진 주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힘에 따라, 미국이 동북아에서 추진 중인 대중국봉쇄전략을 지지하고 주한미군이 영구 주둔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또한 “양 정상은 기술력을 활용하여 양국군을 변형시키고 새로이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대처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한·미동맹을 현대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하고 있다. 이러한 합의는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계획을 그대로 수용하고, 한국군의 현대화와 전력증강이라는 명분하에 미국무기의 구매를 확대하고, 미국의 MD체제에 편입을 기정사실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곧 이어 한국을 방문한 월포위치 미 국방부 부장관이 한국군의 전력 증강이라는 구실 하에 미국 무기의 구매를 강요함으로써 현실로 드러났다.

한편 2003년 11월 7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지속적으로 중요함을

<sup>21</sup> 『연합뉴스』, 2003년 3월 11일.

<sup>22</sup> 『연합뉴스』, 2003년 3월 6일.

재확인”<sup>23</sup>한 이래, 2004년 10월 22일 워싱턴에서 열린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에서도 재차 확인<sup>24</sup>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란 주한미군 활동 범위의 확장을 의미한다. 이는 바로 주한미군이 한국 이외의 지역에 투입되어 군사 작전을 할 수 있다는 매우 심각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당국자들은 그 의미와 파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의 요구에 동의해주는 심각한 실책을 범했다.

## 2) 한국정부의 ‘협력적 자주국방론’의 문제점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주한미군 재배치와 재편에 대한 한국정부의 대응은 ‘협력적 자주국방론’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자주국방론’의 내용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2004년에 발간한 『평화변영과 국가안보』<sup>25</sup>에 잘 정리되어 있다.

『평화변영과 국가안보』 보고서는 ‘협력적 자주국방’의 개념을 “한·미동맹과 자주국방의 병행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협력적 자주국방’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자주국방은 스스로의 힘으로 국방을 담당하려는 노력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독자적 국방만으로 국가의 생존과 국민의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기는 불가능하며 동맹국과 우방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다.<sup>26</sup>

그러나 ‘협력적 자주국방’은 매우 모순적인 발상과 내용을 담고 있다.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군비를 계속 강화해 나가면서, 남북 간에 화해협력을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자주국방을 달성하겠다고 한다. 한·미동맹을 안보의 근간으로 삼아 발전시키면서, 동북아에 다자안보체제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로 상반되는 것들을 “동시에 추진”하고 “병행 발전”시키겠다는 밝히고 있다. 말 그대로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자주국방이란 다름 아니라 지금과 같은 미국에 종속적인 안보에서의 탈피를 의미한다. 한·미동맹관계를 더욱 강화 발전시키면서 자주국방을 하겠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다. 이러한 자주국방은 존재할 수 없다. 자주국방은 미국의 군사전략과 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우리가 얼마나 독자적인 안보전략과 정책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sup>23</sup>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제4항, 2003년 11월 7일.

<sup>24</sup> 「제3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 제4항, 2004년 10월 22일.

<sup>25</sup> 국가안전보장회의, 『평화변영과 국가안보』 (서울: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2004).

<sup>26</sup> 위의 책, pp. 26-27.

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자주국방을 강조하면서도 오히려 주한미군의 전력이 증강되고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모순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참여정부’가 내세워온 ‘협력적 자주국방’과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은 동전의 양면임이 드러난 셈이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협력적 자주국방’을 통해 한·미동맹이 한층 강화되고 미국의 전략 틀에 더욱 견고히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협력적 자주국방’ 개념의 또 다른 위험성은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대규모 군비증강의 추진을 시도하고 있는 점이다. “아직도 대북억제를 주도적으로 달성할 만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면서, “자주적 정예군사력의 건설을 위해”, “적정 수준의 국방예산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27</sup> 우리는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자주국방을 핑계 삼아 2004년 국방예산이 탈냉전 이후 최대규모의 증액이 이루어진 바 있다. 마구잡이식 무기도입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의 강요에 의해 MD무기체제를 갖춘 이지스함 등 MD 관련 무기들이 도입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협력적 자주국방’은 군축의 가능성을 없애 버리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이러한 모순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이 결여된 전략과 정책의 결말은 다음과 같이 예상된다.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국방비를 대폭 늘려 미국이 요구하는 MD 관련 무기들을 구매해 미국의 MD체제에 참여하여 미국의 동북아 패권전략틀에 공고히 편입되어 오히려 미국에 대한 군사적·안보적 종속성이 심화되어 갈 가능성이 크다.

### Ⅲ.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와 그 영향

#### 1.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첫째, 주한미군의 고유한 역할로 인식되어온 대북 전쟁억제력의 역할을 상실<sup>28</sup>하게 되었

<sup>27</sup> 위의 책, p. 42.

<sup>28</sup> 주한미군이 대북 전쟁억제력으로의 의미를 상실한 것에 대한 자세한 주장은 이철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한국의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을 위하여,” 『주한미군과 반미담론, 그리고 언론』,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주최 토론회 발표논문, 2003년 3월 28일 참조.

다. 이제 주한미군의 역할은 대북 전쟁억제력의 역할보다는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 전략 차원에서의 역할로 변화하고 있다. 미 제2사단의 후방배치로 인해 주한미군이 ‘인계철선’(wire-trip)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되었다. 또한 주한미군을 다른 군사작전지역으로 이동 투입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으로 개편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역할이 이제 더 이상 대북억제력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한편 럽스펠드는 2003년 3월 6일,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한국의 GDP가 북한의 25~35배나 되고, 전방의 억제력을 스스로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밝힘으로써,<sup>29</sup> 주한미군이 더 이상 대북 전쟁억제력이 아님을 시인한 바 있다.

둘째, 대중국봉쇄전략을 위한 ‘전진배치침병’의 역할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전략의 중심이 중국에 대한 봉쇄 내지는 견제전략에 두어짐에 따라,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시아주둔 미군의 주요 역할이 중국전제 역할로 변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해공군력 강화와 한국에서 해·공군기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은 중국봉쇄를 위한 미국의 ‘전진작전기지’로 활용되고, 주한미군은 ‘전진배치침병’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이미 오산 미 공군기지를 100만평 정도 확장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 또 미국은 한국에서 새로운 해군기지를 확보하려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 화순항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려는 우리 해군의 계획이 미국의 이러한 의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우리 해군이 그러한 의도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정책과 한·미관계의 현실을 고려할 때, 화순항이 미국의 전진기지화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미국은 현재 일본에 한정돼 있는 해군기지를 한국에서도 확보할 필요성을 느낄 것이고, 지정학적인 가치 면에서 제주 화순항이 그 후보지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은 제7함대사령부가 있는 일본의 요코스카 기지와 사세보항을 보완해주는 전진기지로 화순항을 이용하려 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국에서 해공군기지의 확대는 대중국봉쇄를 위한 단순한 해공군력의 증강으로 끝나지 않고, 한국을 미국의 MD체제에 끌어들이고 한국을 미국의 MD체제를 위한 전진기지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우려된다. 결국 대폭 확장되는

<sup>29</sup> 『연합뉴스』, 2003년 3월 7일.

오산공군기지는 미국 MD체제의 최전방기지로 전략하게 되고, 제주도 화순항에 해군기지가 건설된다면 미국 MD체제의 주요 거점 노릇과 미국 핵함정과 핵잠수함들이 이용하는 전진기지 역할을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셋째, 한국 이외에 다른 군사작전지역에 유사시 이동 투입할 수 있는 ‘신속대응군’의 역할로 전환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제2사단을 미래형 전투시스템(FCS: Future Combat System)을 갖춘 ‘신속대응군’ 목적의 ‘행동부대’(UA)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고, 이 ‘신속대응군’은 한국에 고정적으로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와 중동지역에서 대테러전과 대량파괴무기 확산방지를 병자한 미국의 군사작전과 침략전쟁에 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 2.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영향

### 1) 동북아 군비경쟁의 가속화

주한미군을 비롯한 아시아주둔미군의 재배치와 재편은 3가지 측면에서 동북아에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미국과 중국 간의 군비경쟁이다. 미군재배치로 중국에 대한 포위압박정책이 강화되고 군비증강이 이루어짐에 따라, 중국 역시 이에 대항하기 위한 새로운 무기 개발과 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미국이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MD계획을 추진함에 따라, 중국으로서도 이에 대항하기 위해 신형 핵탄두 개발을 비롯해 ICBM과 SLBM의 추가 개발과 배치를 서두를 것이다. 더구나 미국의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 확대 정책은 중국의 군비증강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둘째, 미국의 MD계획에 따른 새로운 무기의 유입이다. 미국은 동북아에 MD 구성을 위해 이지스함과 패트리엇 미사일등의 추가 배치를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과 한국을 지상레이더기지의 후보지로 상정하고 있다.

셋째, 미국의 군사력 개편계획에 따라 신형 첨단무기들의 유입과 배치가 가속화 될 것이다. 미국은 군사력 구조를 첨단무기로 무장하고 기동성이 강화된 신속배치전력으로 개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을 비롯한 아시아주둔 미군의 장비가 첨단화되고 새로운 무기의 유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 2) 미·일군사동맹 강화와 일본군사대국화의 가속화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을 비롯한 아시아 주둔 미군의 재배치와 재편을 기하

면서, 미·일군사동맹체제를 강화하는 일환으로 사실상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지원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와 포위에 두어진 부시 행정부의 정책에 따라, 부시 집권 이후 미·일군사동맹관계는 이전보다도 한 단계 격상된 형태로 발전해 왔다. 이미 부시 행정부 집권 초기부터 고위 외교안보관리들은 여러 차례에 걸쳐 미·일군사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미·일동맹관계를 미·영동맹관계”로 격상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의 GPR에 따라, 미국과 일본 양국 간에는 주일미군과 자위대의 기지 공동사용과 오키나와 주일미군 해병대의 이전, 양국 안보조약상의 ‘극동조항’에 대한 해석, 주일미군의 활동범위 확대와 역할 변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의 전력 중심으로 삼는다는 계획아래, 대규모 병력을 주둔시키는 ‘전력투사허브’(PPH: Power Projection Hub)로 설정하고, 미군기지의 강화와 미군 사령부의 일본이전 및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sup>30</sup> 미 국방부는 주일 미공군기지가 주둔하고 있는 요코다 공군기지를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군사중심으로 설정하고, 이곳으로 일본 항공자위대 사령부를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미국은 워싱턴 소재 육군 제1군단 사령부를 일본 가나가와현 자마기지로 이전을 일본측에 요청했다.<sup>31</sup> 일본정부는 주일미군의 활동범위를 “극동(필리핀 이북)”으로 한정하고 있는 「미·일안보조약」 6조를 들어 처음에는 난색을 표시했으나, 제1군단 사령부의 이전을 받아들이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32</sup>

뿐만 아니라 일본은 미국이 주도하는 MD계획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일본은 2003년 말 해상배치형 미사일 SM-3 등의 시스템을 미국으로부터 구매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미국과 공동으로 MD 시스템을 개발하여 실전 배치하는 한편 일부 부품을 미국에 수출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외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해온 ‘무기수출 3원칙’도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본은 MD체제를 2004년부터 도입하기 시작해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실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sup>33</sup>

이처럼 일본은 미국의 GPR에 편승해, 이른바 미국과 ‘군사적 일체화’에 기반 한

<sup>30</sup> 『한겨레신문』, 2004년 5월 19일.

<sup>31</sup> 『프레시안』, 2004년 5월 31일.

<sup>32</sup> 『경향신문』, 2004년 10월 17일.

<sup>33</sup> 『연합뉴스』, 2004년 10월 18일.

미·일동맹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군사대국화의 야심을 달성해 가고 있다. 미국 역시 중국에 대한 견제보쇄정책의 측면에서 사실상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묵인 내지는 지원하고 있다.

부시 행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미·일군사동맹관계 및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관련해 몇 가지 새로운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첫째,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법적인 마지노선 역할을 해온 「일본헌법」 제9조의 개정에 대한 미국의 지지로 나타날 것이다. 둘째, 공중급유기와 경항공모함 제공 등 일본군대의 '전력투사능력'(power projection capability)의 향상을 지원할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안보정책이 지금까지 견지해 왔던 '전수방위'(專守防衛)의 폐기를 의미한다.

### 3)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군비증강

주한미군 재배치는 '협력적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대폭적인 국방비 증액과 맹목적인 군비증강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방부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5년도 국방비는 2004년도보다 13.4% 늘어난 21조 4천 752억 원에 달한다.<sup>34</sup> 경제난 속에서도 2004년도 국방예산은 탈냉전 후 최대인 8.1%나 증가했고, 전체 정부예산 증가분의 60% 이상이 국방예산에 배정된 바 있다. 우리 군은 이미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총 92조 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규모의 '국방중기계획'을 추진 중이다.

주한미군 감축을 기획 삼아 국방부는 구실이 없어 그동안 미뤄왔던 대규모 무기 구매계획들을 자주국방이라는 미명아래 한꺼번에 추진하고 있다. '협력적 자주국방' 10개년 계획에 따라 향후 10년간 국방부예산을 연간 GDP 비율 3.2%로 늘이고, 연간 20억 달러(2조4천억 원)씩 투입해 첨단무기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방연구원(KIDA)은 주요 무기체제 획득을 위해 2010년까지 약 64조, 향후 20년 동안 약 208조 원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 4)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 위험성

미국이 주한미군 재배치와 개편을 서두르는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이 지역동맹으로 변화하고 있고, 한·미연합군의 작전범위가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미8군 사령관의 최근 발언<sup>35</sup>은 이런 우려를 증폭시켜주기에 충분하다. 파문이 일자 사

<sup>34</sup> 국방부, 『2005년도 국방예산 요구(안)』 (서울: 국방부, 2004.6), p. 1.

전이라고 한 발 빼기는 했지만, 그의 발언은 미국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미국이 주한미군을 비롯해 아시아주둔 미군을 재배치하고 있는 주요한 목적의 하나는 중국포위다. 미국의 세계전략목표가 21세기 미국의 세계패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잠재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데 두어져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현재의 아시아주둔 미군은 냉전시대 주적이었던 소련을 대상으로 배치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을 견제하고 봉쇄하는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배치가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이처럼 주한미군은 중국견제가 주목적인 아시아지역군으로 개편되고 있고, 주한미군기지는 중국봉쇄를 위한 전진기지로 바뀌고 있다. 미국이 2사단 감축에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한반도에 추가 배치하려는 110억 달러의 무기도 실은 대부분 패트리엇미사일과 같은 미사일방어(MD)용과 대중국용 정보수집장비들이다. 미국은 오산공군기지 내 패트리엇 PAC-3를 증강 배치하는 것은 물론 군산과 광주에도 PAC-3를 배치하고 있는데, 한반도를 종으로 PAC-3를 배치하고 있는 것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일부 언론은 주한미군기지가 마치 2급기지로 강등된 듯이 호들갑을 떨었다. 일본은 '전력투사허브'(PPH: Power Projection Hub)가 되고 한국은 한 급 낮은 '주요작전기지'(MOB: Main Operating Base)가 된다는 것이다. 외국기지의 4가지 종류는 등급이라기보다는 사용하는 목적의 차이를 의미한다. PPH가 후방에서 군사력을 비축하고 집결해두는 기지라면, MOB는 전방에서 실제로 군사작전을 하는 전진기지다. 중국을 염두에 둔 기지배치다. 따라서 중국포위전략이 구체화될수록 주한미군기지의 전략적 중요성은 이전보다 오히려 더 커질 것이다. 오산·평택에 50년 이상 사용할 최첨단화 된 영구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국국민이 원하면 내일이라도 철수"할 만큼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이렇게 된다면 우리 안보환경은 크게 악화될 것이다. 한·미동맹이란 미명아래 한반도 밖에서 행해지는 미국의 군사작전과 군사적 필요에 우리군이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치르는 침략전쟁마다 따라 다녀야 할 판이다.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충돌에 한국군이 동원되어 중국과 전쟁을 치러야 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설령 우리군이 대중국 군사작전에 직접 동원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주한미군이 동원되고 한국이 기지로 이용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중국과 군사적

<sup>35</sup> 『한겨레신문』, 2004년 5월 26일.

대결을 의미한다.

### 5) 대북한 공격력 강화

미 제2사단과 용산기지의 후방으로 이전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공격 가능성과 공격력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인계철선’(wire-trip) 역할을 해온 것으로 인식되어 온 미 제2사단과 용산미군기지의 후방 재배치는 북한의 보복공격으로 인한 미군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의 국회 발언은 주목을 끌었다. 노회찬 의원은 2004년 11월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현재 추진중인 미2사단 재배치는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정밀타격(Surgical Strike) 능력을 갖추기 위한 것으로, 이를 작전계획으로 만든 것이 ‘작전계획 5027-04’”라고 밝혔다. 그는 제1차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 회의록을 공개하고 “북한이 핵 프로그램 및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혹은 이라크전 때처럼 의혹이 있다고 미국정부가 판단할 경우에 북한을 공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 의원이 공개한 FOTA 회의록에 따르면, 미국은 회의에서 동맹 강화 세부 계획을 설명하면서, “먼저 미국은 한반도에 첨단 C4I 체계를 도입할 것이고 이는 적이 아군을 식별하기 전에 격퇴할 가능케 함..., 특히 C4I와 함께 첨단무기가 도입되면 정밀타격에 있어 가공할 능력을 가져다줄 것임, 발전된 전쟁수행능력을 위해 기 지구조를 조정해야 함, 미2사단의 현 위치는 전쟁수행에 적합하지 않음”이라고 언급했다는 것이다.<sup>36</sup>

뿐만 아니라 미국은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의 일환으로 한국 내 및 한반도 주변에 군사력을 강화시키고 있어,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sup>36</sup> 『동아일보』, 2004년 11월 11일.

## IV. 한·미동맹의 개편방안

### 1. 한·미동맹의 변화 요인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후 만 51년을 넘기고 있는 한·미동맹은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게 되었다.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으로 촉발된 주한미군의 개편과 성격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든지 한·미동맹의 개편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2003년 5월 「한·미정상 공동성명」에서 한·미 양국은 이미 “포괄적이고 역동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공동 노력을 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양국은 2003년 4월 9일부터 시작된 「미래한·미동맹정책구상회의」(FOTA)에서 주한미군 재배치와 감축에 관한 협상을 마무리 지었다. 게다가 한국과 미국은 「한·미동맹전략정책구상회의」(SPI)를 신설하여, 한·미동맹관계의 새로운 변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당시와는 다른 상황 변화들이 발생했다. 다음과 같은 한·미동맹의 변화 요인들이 존재한다. 첫째, 동맹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동위협인식이 한·미간에 달라졌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사실상 북한을 공동의 주적으로 상정한 것이나, 북한에 대한 인식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한·미간에 괴리를 보이고 있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체제경쟁에서 남한의 승리로 인해, 한국 내에서 북한을 적으로 보는 인식과 북한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인식이 약화되었다. 특히 대다수 한국 국민들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지지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칠레 산티아고 APEC 정상회담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 중간 기착지인 로스앤젤레스에서 행한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노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선제공격론에 대해 “북한에 대한 무력행사는 한국국민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이며 잿더미 위에서 오늘의 한국을 이룩한 우리에게 또 다시 전쟁의 위협을 감수하기를 강요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sup>37</sup>

반면 미국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서, 북한은 일방주의정책에 주요한 명분이 되어주고 있는 주요한 ‘위협원’이다. ‘악의 축’과 ‘테러지원국’, ‘불량국가’로 선정된 북한에

<sup>37</sup> 『경향신문』, 2004년 11월 15일.

대해 미국은 선제공격을 비롯해 군사적 행동과 전쟁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둘째,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상호’라는 표현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일방적’(one-sided) 성격의 동맹관계를 규정하고 있는 ‘보장조약’(guarantee treaty)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호자-피보호자’(patron-client)형태의 동맹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한국의 꾸준한 군사력 증강에 의해 한국 단독으로도 북한에 대한 충분한 억지력을 확보했으며, 한국의 군사력이 북한을 능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한국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과 한국국민들의 자의식 성장으로 인해, 한국은 더 이상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한·미동맹관계를 받아들여야 하지 않고 있다.

셋째, 한·미동맹의 목적이 변하고 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조약의 발동사유’(casus foederis)를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armed attack)에 의하여 위협을 받는다”<sup>38</sup>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지리적 범위도 조약당사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territories)”<sup>39</sup>로 사실상 한정하고 있다. 이처럼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한 목적상, 한반도에 한정된 ‘방어동맹’(defensive alliance)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동맹을 한반도에 한정된 ‘방어동맹’에 머물지 않고 지역적 역할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sup>40</sup> 중국에 대한 견제와 봉쇄를 염두에 둔 ‘지역동맹’(regional alliance)과 미국의 군사적 패권에 기여하는 ‘패권동맹’(hegemonic alliance)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군사적 대결과 안보환경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이다.

## 2. 한·미동맹의 개편 방향

한국의 안보정책이 한·미동맹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한·미동

<sup>38</sup> 「한·미상호방위조약」 제2조.

<sup>39</sup>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sup>40</sup> 2003년 2월 20일 한 세미나에서 라언 J.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연합뉴스』, 2003년 2월 24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배경 가운데 하나는 한·미연합작전의 지리적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의 경우,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지리적 범위를 넘는 것으로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파병을 할 법적 근거가 없다. 따라서 미국은 자국의 군사행동을 지원하는 한국군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조약의 개정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맹관계의 해소를,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현 한·미동맹관계의 개선 내지는 개편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동북아에서 한·미동맹을 비롯해 동맹체제를 해소하고 대신 ‘협력안보’(cooperative security) 개념에 입각한 다자안보협력체제가 주도하는 안보질서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중기적으로는 다자안보협력체제와 동맹체제가 공존하는 형태를 모색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유럽에서 NATO와 「유럽안보협력기구」(OSCE)가 병존하는 것처럼, 다자안보협력체제와 한·미동맹이 병존하는 형태가 될 것이다.<sup>41</sup>

반면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의 변화 요인들을 감안하여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요구된다. 한·미동맹의 개편에는 특히 다음의 네 가지 요소가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동북아의 정세 변화를 포함한 동북아의 장기적 안보환경의 변화이다. 둘째,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의 통일 등 한반도 안보상황의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지상전력의 감축과 상대적으로 해·공군력 및 정보능력의 향상을 통해 소수정예과화군을 지향하는 한국군의 미래지향적 개편과의 조율성이다. 넷째, 한·미동맹관계의 불평등을 가져오게 하고 있는 법률적·구조적·제도적 요인의 제거와 개선을 통해, 한·미동맹을 보다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에 따라 한·미동맹은 단기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개선과 보완을 통해 개편을 모색해야 한다.

### 1) 방어동맹에 한정

한·미동맹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순수한 방어동맹’에 한정시켜야 한다. 한·미동맹은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가상하고 있는 ‘작전계획 5027-0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수한 방어동맹’을 벗어나 매우 공격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미국은 여기서 더 나아가 한·미동맹을 ‘지역동맹’, ‘폐권동맹’, ‘공격동맹’으로 확대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의 이러한 시도에 대해 단호히 반대의 입장을 표해야 하며, 한·미동맹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대로 ‘순수한 방어동맹’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들을 미국에 요구하고 또 강구해야 한다. 첫

<sup>41</sup>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체제의 형태는 동맹체제와 대체성을 지니는가, 아니면 양립성 또는 보완성을 지니는가에 따라 각각 ‘대체형’, ‘양립형’, ‘보완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철기, “집단안보·집단방위·협력안보의 동북아 적용가능성에 관한 비교 고찰,” 『통일문제연구』, 제7권 2호 (1995), pp. 235-262 참조.

째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등 선제공격을 담고 있는 작전계획이나 전략의 수립에 반대해야 한다. 둘째로 유엔평화유지활동과 같이 국제연합의 합법적인 승인이 없이, 한·미 양국의 영토를 벗어난 지역에 대한 군사행동이나 군대의 파견을 금지해야 한다. 셋째로 한국의 영토가 제3국에 대한 군사행동을 위한 군사기지로 이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넷째로 미국 이외에 미국과 군사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제3국이 한국의 영토에서 군사작전을 하거나 또는 합동군사작전을 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

## 2) 주둔권에 대한 통제 강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해 한국의 영토 내에 미군의 주둔권<sup>42</sup>을 인정하되, 한국의 통제권을 강화해야 한다.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하여(as determined by mutual agreement)” 미군의 한국 내 배치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미군 병력의 출입과 무기 및 장비의 반입과 반출을 한국과 협의 없이 자의적으로 해왔다. 따라서 미군의 한국 내 주둔권에 대한 통제를 다음과 같은 강화해야 한다.

첫째, 「한·미상호방위조약」 개정을 통해 미국에 대한 한국내 공여지 제공과 관련한 제한이 필요하다. 조약 제4조는 ‘전토기자공여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서, 한국의 모든 국토를 사실상 마음대로 미국이 기지로 요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일본과 같이 특정지역으로 한정해야 하며, 무상공여 방식에서 유상임대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제6조에서 조약의 유효기간을 사실상 무기한으로 하고 있어, 공여지 제공도 무기한으로 되어 있다. 물론 단서로 어느 일방이 일 년 전의 통보로 조약을 종지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미국이 필요한 경우 일방적으로 종지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른 동맹조약과 마찬가지로, 조약의 유효기간을 유기한으로 하고 일정기간마다 개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미군에 제공된 공여지에 대해서도 일정기간마다 재협상과 재계약 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미국이 한국의 영토에 추가적인 병력을 증원하거나 새로운 무기를 반입할 경우, 한국정부와 사전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미국이 자의적으로 열화우라늄탄과 같은 무기 및 장비를 지금처럼 마구잡이로 반입하거나, 과거처럼 미국이 일방적으로

<sup>42</sup> 「한·미상호방위조약」 제4조는 “상호적 합의에 의해서 미합중국의 육·해·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에 대하여 미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에 핵무기를 반입·배치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셋째, 한국 내 미군 함정의 기항과 항공기의 기착은 허용하되, 핵무기를 탑재한 함정과 항공기의 기항과 기착의 경우 한국정부에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 3)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와 한·미연합지휘체제의 개편

한·미연합사령관인 주한미군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환수해야 한다. 1994년 12월 1일부터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에게 넘어 오긴 했지만, 이 또한 형식적인 이양에 불과하다. ‘연합권한위임사항’(CODA)에 의해,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쟁수행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 이 때문에 평시에도 전시작전계획의 수립,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주관, 조기경보와 전략 및 전투정보 제공을 위한 연합군사정보의 관리를 책임지고 있다. 또한 한·미연합군의 경계태세 수준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을 여전히 지니고 있다. 자국 군대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주권국가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한·미연합사령부(CFC)를 중심으로 한 한·미연합지휘체제 역시 구조적·제도적으로 한국군의 대미종속을 가져오게 하고, 한국군의 자주국방을 가로막는 역기능을 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의 미군 위임과 한·미연합사체제는 다음과 같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하고 있다.

첫째, 한국군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는 데 장애가 되고 있다. 미국이 말하는 한·미 양국군간의 역할분담론에 따라 한국군은 지상전력을 책임지고 미군이 해공군력과 정보력을 담당하는 현 구조 아래에서는 이른바 ‘소수정예과학군’으로 한국군을 미래지향적으로 개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둘째, 미국의 정보력에 의존함으로써 독자적인 정보판단과 작전이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제공하는 선별적이고 왜곡된 정보로 인해 국가정책과 군사작전상에 큰 오류와 왜곡을 초래케 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셋째, 미국으로부터 미국무기의 구매를 강요당하고 미국의 무기체제에 종속적으로 편입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한·미 양국군 간에 무기의 ‘상호운용성’과 한·미연합작전체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명목 하에 자국의 도태무기를 포함해 미국 무기의 구매를 강요당해 왔다.

넷째, 미국의 동북아 및 세계군사전략체제의 하위체제로 편입됨으로써 미국의 군사적 필요와 목적에 동원되고 이용될 수 있다. 실례로 미국의 대중국봉쇄전략에 동

원되고, MD체제에 편입될 가능성을 낳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국내 일각에서 한국군의 독자전 수행과 정보수집 능력 미비를 들어 시기상조론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미 「넌-워너(Nunn-Warner) 수정안」에 따라 1990년부터 추진된 3단계 주한미군 감축계획에 의하면, 늦어도 종결 년도인 2000년까지는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에 이양되게 되어 있었다. 주한미군 3단계 감축계획이 추진되던 1990년도 초에 비해 한국군이 현대화되고 그 전력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된 지금에 전시작전통제권 환수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에 따라 수직적이고 불평등한 한·미동맹관계를 가져오게 하는 구조적·제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한·미연합사령부는 해체되어야 한다. 미·일동맹과 같이 기능적으로 역할분담을 하는 병렬형의 수평적 협력체제나, NATO와 같이 평시에는 자국 군대를 유지하다가 전시에 통합사령부를 구성하는 형태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미국은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의 재배치와 더불어 아시아주둔 미군의 지휘체제를 통폐합하는 방향에서 지휘체제를 개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한·미연합사의 개편 내지는 해체가 조만간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 4) 유엔사령부(UNC) 해체와 비무장지대(DMZ) 관할권의 한국 이양

주한미군이 아직도 유엔사의 간판을 달고 있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 간판뿐만 아니라 유엔사를 해체해야 하며, 이는 주한미군의 성격 변화를 위해서도 불가피하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 이전이라도 유엔사를 해체해야 한다. 정전협정의 타방 당사자인 북한이 이미 유엔 회원국이고, 또 다른 타방 당사자인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인 현실에서 유엔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형식상 우스울 뿐만 아니라 비현실적이다. 이미 1975년 11월 18일,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사의 해체가 결의된 바 있다.

또한 비무장지대 남쪽지역의 관할권을 유엔사라는 이름아래 주한미군이 행사하고 있는 것 역시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주권국가로서 자기 영토에 대한 관할권을 갖고 있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더구나 앞으로 남북관계가 개선되어 남북간에 교류가 활성화되고 남북 간에 도로와 철도가 연결될 경우를 대비해서도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을 조속히 환수해야 한다.

2002년 11월, 남북이 비무장지대의 지뢰 제거 상태를 상호 확인하기 위해 검증단을 교환키로 했으나 유엔사가 군사분계선(MDL)의 월선 승인권을 고집해서 검증

작업이 무산된 바 있다. 또한 육로를 통한 금강산 시험관광을 위해 군사분계선 통과문제와 관련해, 관례를 깨고 유엔사가 정전협정 규정에 따른 엄격한 사전 승인 방침을 고수해 마찰을 빚기도 했다.<sup>43</sup> 이처럼 남북 간 교류와 왕래가 본격화될 경우, 유엔사의 관할권 행사는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오는 것은 물론, 미국이 남북관계를 통제하고 방해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유엔사 해체는 다소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으므로, 우선 비무장지대에 대한 관할권만 한국이 이양받는 방안이라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V. 결 론: 한국 안보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우선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관계의 불평등을 가져오게 하고 있는 법률적·구조적·제도적 요인의 제거와 개선을 통해 한·미동맹을 보다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에 따라 조성될 수 있는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 안보환경의 악화에 대비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기존의 안보정책에서 탈피하여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평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주한미군의 재배치 및 재편과 이에 따른 역할 및 성격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안보패러다임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대한 방안도 연구해야 한다. 무조건 주한미군은 있어야 하고 통일 후에도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퇴행적 사고이다.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로 한 한국군의 모습과 한국안보의 미래를 구상해야 한다. 이는 한국군의 미래지향적 개편과 한국안보의 미래지향적 재정립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미국의 군사전략 및 정책들에서 탈피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의 군사전략 및 정책 틀에 편입되어 있는 한, 우리는 결코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와 통일을 이룰 수 없다. 또한 한국의 안보정책은 미래에 실현될 통일을 상정하여 추진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남북 간의 균축을 고려하여 수립되어야 하며, 북한 주적 개념을 폐기해야 하며, 현재의 공격적인 군사정책 및 군사전략을 방어지향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안적인 정책 및 전략으로서 「헬싱키선언」 이후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를

<sup>43</sup> 『연합뉴스』, 2002년 12월 1일.

통한 유럽에서 다자안보협력의 이론적 배경이 된 ‘협력안보론’(cooperative security)과 「유럽재래식군축조약」(CFE)의 전략적인 배경 역할을 한 ‘비공세적 방어’(non-offensive defense)전략에 대한 한반도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sup>44</sup> 이를 통해 동북아 차원의 지역 군축을 이룩하고, 동북아에 ‘비핵지대’(NWFZ: nuclear-weapon-free zone) 내지는 ‘대량파괴무기금지지대’(WMDFZ: weapons of mass destruction free zone)를 창설하는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sup>44</sup> ‘협력안보론’과 ‘비공세적 방어’ 전략의 한반도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이철기, “남북한 군비 통제와 군축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제29집 4호 (1995), pp. 516-524 참조.